국정원 대선개입 '눈덩이'…野 "특검 실시·黃법무 해임" 강공

"특별수사팀 공소장 변경에 또 외압"
민주 의원들 서울광장서 거리행진
與 "검찰 수사·법원 재판 지켜봐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윗 120만여건이 추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장 변경에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특검 도입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12일만에 장외집회를 갖고 대대적인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전날 밤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수사상황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한 뒤 이날 오전 다시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 고강도 대여공세를 퍼부었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 90명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국회 대정부질문 정회 시간을 이용해 서울광장에 모여 스크럼을 짜고 광화문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민주당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9차 국민결의대회 이후 12일 만이며 지난 10일 천막농성장을 철거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행진 도중에는 '황교안 법무장관 등 해임하고 특검 즉각 실시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즉각 수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한길 대표는 장외 의원총회에서 "트윗 120만여건을 갖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특별수사팀의 젊고 용기있는 검사들이 외압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파묻혔을 거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배재정 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는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눈덩이 같다"면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3·15 부정선거와 같은 사태'라고 했던 발언은 틀린 말이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2만7000천여건에 대해 '국정원 외부 조력자들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소환을 방해하는가 하면 공소장 변경을 하지 말고 참고자료로 내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는 결국 재판에 가서 그대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당파적인 주장을 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와 재판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를 보면서 결국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1만건이라는 수치는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라며 "지난 1차 공소장 변경에서 철회된 2만7000여건을 제외한 2만8000여건을 봇(BOT)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리트윗한 것으로 내용은 줄어들고 건수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문제 제기한 트위터 글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정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두행진을 마친 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어느 한 쪽이 '죽어야' 끝날 모양

국정원 트윗 121만건 또 발견…2차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모두 위법하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550건이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000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000여건으로 파악됐다.

121만 건은 원래 글 2만6550건이 여러 형태로 복사·전파되면서 트위터에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2만6550건은 선거 관련 1만3292건, 정치 관련 1만3258건이다.

검찰은 2만6000여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 몇건인지, 국정원 직원 몇명이 계정 몇개를 동원했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발견된 트윗 2만6550건은 중복을 제거한 실(實) 텍스트"라며 "이 글들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된 것이 121만건으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의 121만건이 모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관련 글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지난 총선 및 재·보선 관련 글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선거 개입 글을 트위터에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봇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수십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한꺼번에 수십~수백개씩 퍼나르기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유령 계정'이 생성돼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與 "제2의 IMF 위기" 민주당에 "협조" 압박

새누리당은 21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우선 '제2의 IMF 위기'를 막기 위해선 정쟁을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97년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30대 그룹 절반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그해 11월 21일 바로 오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픈 기억이 있다"면서 "국내외 악재 속에서 기업이 고군분투하는데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조속히 정쟁을 매듭짓도록 양당이 국가정보원 특위, 대선개입 특검에 대해 한 발짝씩 양보하고 정치권 공멸의 길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와 아무런 상관없는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맞바꾸자는 정치적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를 희생하며 마냥 기다려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고사성어로 '갈택이어'(竭澤而漁·연못 물을 퍼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일시적인 욕심 때문에 먼 장래를 생각하지않는 것을 지적)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당리당략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얻으려 민생이라는 연못을 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을 국회 주변에 머물게 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갖췄지만, 직권상정 카드는 여야 관계를 급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